

‘대광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주와 그 인근’ 대도시권에 포함

민주 이춘석 의원 “법사위 통과 위한 전북 정치권의 협력 절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주도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앞서 이춘석 의원은 “1997년 대광법이 시행된 이후 2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삼 지역 제외) 전북만 소외됐는데, 이 법에 전북도 포함시켜 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이나, 입법체계에 위반되냐”고 물문을 토론했다.

문진석 간사, 민홍철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

부의 지원에서 소외돼왔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이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춘석 의원은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동나에 가까운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교통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 지역에 이익을 주면서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토위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가는 만큼 이제는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기회에 2025년을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남원시의회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체 의원 성명으로 발표했다.

“헌재, 尹 즉각 파면하라”

도내 기초의회 성명 잇따라... 천막농성도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체 의원 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날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

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임무 그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며,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책임을 온 시민과 함께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3

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이루어진 지 90일이 지났음에도 헌정질서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법원의 오판으로 잠시 자유를 얻었을 뿐, 12·3 내란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중태하

게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선고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최용수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의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과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고, “내란 수괴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순창군의회는 성명서 발표 이후 마련된 천막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는 농성을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기자

김제시의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13

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강력한 행보에 나섰다.

의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선언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만이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검찰의 비합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의회는 윤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김제시의회가 앞장서 헌정 질서 회복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서백현 의장은 “윤석열의 석방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명백한 면죄부”라고 일갈했다.

서 의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탄핵을 인용하라”고 단호하게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윤석열 파면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태 및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을 인용할 것과 내란 행위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해산을 강력히 촉구하는 ‘윤석열 파면 및 내란정당 해산 촉구 결의안’(박철원 의원)을 채택했다.

김경숙 부의장은 “만물이 약동하는 춘분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따뜻한 봄을 맞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 지역사회에도 훈풍이 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장경호 의원은 14년간 표류한 동익산업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신속한 순창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김순덕 의원은 아이 건강을 위한 전 기저귀 사용 필요성,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청 신청사 다발적 하자 조기 개선 및 지하주차장 확장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성중기 원주군의원, 민주 사회경제제위 부위원장에

원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제위 위원회 발대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위원회의 사회경제제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성중기 의원은 원주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왔으며,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 의원은 민주당 사회경제제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중기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원주=염재복 기자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 지방정부 권한 강화

민주 한병도 의원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정부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권 존중 사전 협의제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에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특례를 적용하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자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이전 중간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섬 주민의 선박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박병철 한노총 전주지부 의장

민주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



박병철 한국노총전주시지역지부 의장(전북농협 노조위원장 겸임)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며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당의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정책, 각급 선거공약 개발 등의 권한을 갖는다.

박병철 의장은 현재 3선 NH전북농협위원장 등을 지내고 있는 노동운동가로 도내 노동자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의당 도당, 헌재에 尹 파면 촉구

검찰 겨냥 “尹 구속 취소 결정 즉시 항고해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서에서 “내란수괴로 기소된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구속 취소를 결정할 법원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곳곳에서 사법부와 검찰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형사 절차상의 문제일 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탄핵 기각 가능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즉각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민약 결정을 미루거나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이 극심해질 것이며,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전면적인 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